

2020. 12. 일부 개정

대외유출금지

코로나19 감염증 확산 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매뉴얼

2020. 12.



법무부

법 무 실

|| 목 차 ||

| |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|
| I . 개요 | 1 |
| II . 손해배상청구 개관 | 1 |
| ① 민법 상 불법행위책임 | 1 |
| ② 관련 쟁점 | 1 |
| III . 감염병 예방법 상 조치위반에 따른 불법행위책임 .. | 4 |
| ① 자가격리조치 | 4 |
| ② 집합금지명령위반 등 방역수칙 위반 | 8 |
| ③ 역학조사 방해 | 11 |
| ④ 자가격리 권고 등 수칙 위반 | 13 |
| IV . 손해배상청구 절차 | 15 |
| V . 코로나19 구상권 협의체 | 16 |
| VI . 정부법무공단의 법률 지원 | 18 |
| VII . 문의처 | 18 |

I

개요

- 정부당국의 총력 대응에도 코로나19 감염증 확산이 증가세에 있어 국민의 불안감이 고조되는 상황에서, 코로나19 감염 확산 행위에 대해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코로나19 감염증 확산을 방지하고자 함
- '20. 4. 배포하였던 매뉴얼의 내용을 최신화 하고 코로나19 감염 확산행위 유형을 추가 검토하여 코로나19 감염증 확산 방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

II

손해배상청구 개관

① 민법 상 불법행위책임

-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음(민법 제750조)
- 따라서 불법행위책임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는
① 상대방의 고의·과실, ② 행위의 위법성, ③ 손해의 발생, ④ 고의·과실에 의한 위법행위와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를 모두 입증해야 함

② 관련 쟁점

□ 고의·과실

- (고의) 자신의 행위로 인하여 상대방에게 손해가 발생할 것임을 인식하면서도 그러한 행위를 실제로 행하는 것을 의미

- (과실) 사회생활상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다하였다면 일정한 결과의 발생을 인식할 수 있었거나 그러한 결과를 회피할 수 있었음에도 그러한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을 의미
- 격리조치 위반 등 행위 시, 코로나19 감염증 확산 등에 따른 손해가 발생할 것에 대한 인식이나 의사가 있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가 쟁점

□ 위법성

- 일반적으로 고의·과실로 인한 행위로 손해가 발생할 경우 위법성이 인정되는 것으로 평가될 수 있음
- 다만, 그러한 행위가 사회적으로 허용되거나 정당성이 인정되는 등 위법성이 조각되는 사유가 있다면 위법성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음

□ 손해의 발생

-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침해행위에 의하여 현실적으로 손해가 발생한 때 성립
- 코로나19 감염 확산 행위가 없었다면 지출하지 않았을 추가 방역 비용, 코로나19 감염증 검사 비용, 치료비 등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실제 부담한 비용이 손해로 인정될 수 있음
- 일반적으로 손해로 인정될 수 있는 비용은 ① 접촉자 관련 비용, ② 방역 관련 비용, ③ 향후 추가 배상 가능 비용 등이 있으며, 구체적인 범위 및 비용 부담주체는 다음과 같음

| 손 해 내 용 | | 부담 주체 |
|---|---|--|
| 직접 접촉자 관련 비용 | - 직접 접촉자 자가격리 조치에 따른 생활지원비 및 생활지원 물품 구입비(감염병예방법 제70조의4) : 평균 가구원 수 (2.4인) 기준 68만6천 원 | 국가·지자체 (감염병예방법 제70조의4, 동법 시행령 제28조의5) |
| | - 직접 접촉자에 대한 코로나19 검사비(감염병예방법 제64조, 제65조, 제67조) : 약 16만 원 - 검사 이후 확진자 발생 시 해당 환자에 대한 치료비(감염병예방법 제64조, 제65조, 제67조) ※ 치료비의 경우, 개별 환자의 증상에 따른 편차로 인해 사전적·일률적으로 판단하기는 어려움 ※ (의료보험가입자) 치료비는 건강보험 부담금 80%, 본인 부담금 20%이며, 본인부담금에 대해서는 국비 지원 | 국가·지자체 (감염병예방법 제65조 제4호, 제67조 제9호 등) |
| 특정지역 방역 관련 비용 | - 감염병의심자가 머무른 지역 중 오염되었다고 판단된 경우 해당 지역에 대한 방역비 및 방역부분 물품 지원비(감염병예방법 제64조, 제65조, 제67조) ※ 방역비의 경우, 제주도는 최대 5,000만 원으로 산정 하였으나 면적, 장소 등에 따라 지출되는 방역비가 다르고 일정한 기준에 따른 액수가 정해져 있지 아니하여 개별적 파악이 요구됨 | 지자체 (감염병예방법 제64조 제7호) |
| 향후 추가 배상 가능 비용 | - 오염 판단 지역의 폐쇄조치(감염병예방법 제49조 제1항 제9호)에 따른 영업손실 보상액 등은 현재 국비로 지출되고 있지는 않으나, 향후 영업손실을 주장하는 자가 보상청구 시 국가가 보상해야 할 가능성 있음(감염병예방법 제70조 제4호) | |
| ※ 감염병예방법에 따르면, 시·도는 특별자치도·시·군·구 경비의 2/3를 보조, 국가는 시·도 부담 경비의 1/2 이상 보조 | | |
| ※ 보건복지부에 따르면, 진단검사비·치료비·생활지원비의 경우 내국인에 대하여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각 50% 부담, 외국인에 대하여는 국가가 전부 부담 | | |

□ 고의·과실에 의한 위법행위와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

- 불법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고의·과실로 인한 위법행위와 손해 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하며, 인과관계는 구체적 사실 관계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됨

- 격리조치 등 위반행위와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는 손해를 주장하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입증해야하며, 인과관계 인정을 위한 역학조사 등의 조치가 필요할 수 있음

□ 손해배상청구 절차

- 소 제기자가 국가인지 지방자치단체인지에 따라 절차에 차이가 있음
(15쪽 참조)
- 정부법무공단을 통한 소송지원도 가능(16쪽 참조)

Ⅲ 감염병 예방법상 조치 위반에 따른 불법행위책임

① 자가격리조치 위반

□ 자가격리조치

- “자가격리조치”라 함은 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(이하 “감염병예방법”) 상 질병관리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실시하는 다음의 처분·조치를 의미함
 - 제1급감염병 발생 시 감염병의심자를 자가 또는 시설에 격리할 수 있음(감염병예방법 제42조 제2항 제1호)
 - 감염병 유행 시 감염병 전파를 막기 위하여 감염병의심자를 적당한 장소에 일정한 기간 입원 또는 격리시켜야 함(감염병예방법 제47조 제3호)
 -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감염병의심자를 적당한 장소에 일정한 기간 입원 또는 격리시켜야 함(감염병예방법 제49조 제1항 제14호)

- “자가격리조치”는 법률에 근거한 처분·조치라는 점에서, 행정지도의 일종으로 볼 수 있는 “자가격리 권고조치”와는 구별됨
- 예를 들어 수원시 영국인 확진자에게 교부된 유증상자 생활수칙 안내문과 같이 관할 보건소에서 자체적으로 배포한 내용은 감염병 예방법 상 “자가격리조치”가 아닌 “자가격리 권고조치”임

| | 감염병예방법 상 자가격리조치 | 자가격리 권고조치(유증상자 생활수칙 안내) |
|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주체 | 보건복지부장관, 시·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(지방자치단체장) | 수원시 영통구 보건소 |
| 주요 내용 | 외출 금지 (불가피한 경우 관할 보건소에 사전 연락) | 외출 및 접촉 자제 다중이용시설, 대중교통 이용 자제 |
| | 관할 보건소의 1일 2회 연락 및 본인의 증상 모니터링 기록 안내 | 증상 악화 시 보건소 문의 요청 |

- 감염병예방법 상 “자가격리조치”의 구체적 내용은 다음과 같음
- (개요) 질병관리청장, 지방자치단체장은 감염병의 예방과 방역 등을 위해 감염병의심자를 자가 또는 시설 등 일정 장소에 격리할 수 있음
- (통지 방법) 감염병예방법 제43조의 2, 같은 법 시행규칙 제32조에 따라 입원·격리 통지서 발급
- (대상자 준수사항) 감염병 전파 방지를 위한 외출 금지, 불가피할 경우 관할 보건소에 연락 후 외출 등
- (관리 방법) 관할 보건소에서 1일 2회 연락하여 증상 확인, 본인이 증상을 관찰하여 서식에 기록하도록 함

○ 격리조치위반 현황 및 관련 주요 사례는 다음과 같음

| 항 목 | 내 용 | |
|-------|----------|---|
| 위반 현황 | 대상기간 | - '20. 2. 17. ~ 12. 20. |
| | 위반 인원 | - 총 1660명 |
| 주요 사례 | 검사 중 이탈 | - 충북 사회복지무연수센터에서 격리치료를 받던 중 무단 이탈 |
| | 날짜 오인 | - 격리해제 하루 전 통지서가 도착하여 해제일 착오 |
| | 병원 진료 | - 자가격리 대상자 모친의 무릎 통증으로 병원 방문 동행 위해 무단 이탈 - 부산 소재 자가격리 대상자 삼성제일산부인과 진료차 방문 위해 무단 이탈 |
| | 생업 | - 보건당국으로부터 자가격리조치 통보를 받았음에도 병원에 출근(4건) - 자가격리조치 대상자가 본인의 공인중개사 사무실 출근 - 확진자 접촉 사실로 자가격리 통보를 받음에도 불구하고 약국에 출근 - 카페, 음식점 등에 출근(2건) - 자가격리통보를 받았음에도 인근 공원, 인력사무소 방문 - 핸드폰을 숙소에 두고 조업 차 출항 |
| | 선별진료소 방문 | - 선별진료소 방문을 위해 무단 이탈 |
| | 생필품 구입 | - 생필품 구입을 위해 자택 인근 마트 방문 - 마스크 착용 후 편의점을 방문 - 기타 마트, 편의점, 빵집 등 식료품 기타 생필품 구입을 위한 무단 이탈(16건) |

□ 고의·과실 및 위법성의 판단기준

○ 자가격리조치의 요건 및 기간

- 확진환자, 확진환자의 접촉자 등에 해당하여 감염병예방법 상 격리대상임을 통지 받아야 하고, 확진환자 최종 접촉일로부터 14일 간 격리를 유지하여야 함(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-19 대응 지침)

○ 고의·과실이 인정될 수 있는 경우

- 일반적으로 격리대상임을 통지받아 자가격리조치 된 경우, 증상 발현 여부와 무관하게 자가격리조치를 위반할 경우 감염병이 전파 및 확산될 수 있다는 가능성은 인식하였다고 볼 수 있음
- 또한 최소한 자가격리조치 위반 사실이 발각될 경우, 자신의 이동 경로에 대한 추가 방역 등에 따른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 대해서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다고 볼 수 있음

○ 위법성의 인정 여부

- 격리대상자는 스스로 격리조치에 따라야 할 법률상 의무를 지며(감염병예방법 제6조), 위반 시 형사처벌도 가능하므로(감염병예방법 제79조의 3), 고의·과실에 의한 자가격리조치 위반 행위의 위법성은 일반적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큼

※ 송파구 60대 미국 입국자, 주소·연락처를 속이고 자가격리이탈한 사례 참조

- 다만, 전술한 바와 같이 자가격리조치 위반 행위가 사회적으로 허용되거나 정당성이 인정되는 등 위법성이 조각되는 사유가 있다면 위법성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으며, 그러한 점은 구체적 사정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됨

□ 손해 및 인과관계

- 자가격리조치 위반으로 인해 일반적으로 발생 가능한 비용은 ① 접촉자 관련 비용, ② 방역 관련 비용, ③ 향후 추가 배상 가능 비용 등이 있으며, 구체적 범위 및 비용 부담주체는 p.5 참조
- 국가·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각종 경비는 원칙적으로 법률상 의무에 해당하여, 손해로 인정하기는 어려움
- 다만, 자가격리조치 위반자의 행위로 인하여 국가·지방자치단체가 통상 부담할 의무 이상의 비용 지출이 초래되었다는 점이 입증된다면, 추가 비용 지출의 범위에서 국가·지방자치단체의 손해를 인정할 수 있음
- ※ 국가배상청구 사례이기는 하나, 메르스 사태 당시 ① 1번 환자 → 16번 환자 → 30번 환자 순, ② 1번 환자 → 14번 환자 → 104번 환자 순으로 감염병이 확산되었는데, 법원은 국가가 역학조사를 실시하였다면 1번 환자로부터 30번 환자, 104번 환자에 이르기까지 순차 감염된 사실을 알 수 있었음에도 역학조사를 지연하여 결국 30번, 104번 환자가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며 유족에 대한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한 바 있음

② 집합금지명령 등 방역수칙 위반

□ 집합금지명령 위반

- “집합금지명령”은 감염병예방법상 질병관리청장, 지방자치단체장, 보건복지부장관이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흥행, 집회, 제례 또는 그 밖의 여러 사람의 집합을 금지하는 조치를 의미함 (감염병예방법 제49조 제1항 제2호)
- 집합금지명령을 위반한 경우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음 (감염병예방법 제80조 제7호)

-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에 따라 집합금지·제한이 적용되는 시설과 조치 사항이 다르며, 지난 12월 8일 이후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.5단계에 따른 주요 집합금지명령 적용대상과 조치사항은 다음과 같음
- (집합금지) 유흥시설 5종에 더하여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, 노래연습장, 실내 스탠딩공연장, 실내체육시설, 학원은 운영중단

□ 집합제한명령 등 방역수칙 위반

- “집합제한명령”은 감염병예방법상 질병관리청장, 지방자치단체장, 보건복지부장관이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흥행, 집회, 제례 또는 그 밖의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는 조치를 의미함 (감염병예방법 제49조 제1항 제2호)
- 집합제한명령을 위반한 경우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음 (감염병예방법 제80조 제7호)
- 감염병 예방을 위한 방역수칙은 집합제한명령에 근거함
-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에 따라 집합금지·제한이 적용되는 시설과 조치 사항이 다르며 지난 12월 8일 이후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.5단계에 따른 주요 집합제한명령 적용대상과 조치사항은 다음과 같음
- (운영시간 제한) 영화관·PC방·미용실·오락실·독서실·놀이공원·마트·백화점 등 주요 다중이용시설 21시 이후 운영 중단
- (이용인원 제한 등) 공연장은 좌석 두 칸 띄우기 실시, 목욕장업은 16㎡당 1명으로 인원제한하고 음식 섭취 금지, 사우나시설 운영금지
- (모임·행사) 설명회, 기념식, 워크숍 등 50인 이상 모임·행사 금지, 10인 이상 모임·약속 취소 권고

- (종교활동) 비대면 예배·법회·미사·시일식 등을 원칙으로 하며 종교 시설 주관의 모임·식사는 금지

○ 집합금지·제한명령 위반 주요 사례

- ▶ 금산군수로부터 집합금지 명령을 통보받고도 손님을 목욕탕에 입장시킨 업주 불구속 기소 ('20. 4. 대전지검)
- ▶ 서울시장의 집합금지 명령에 위반하여 손님들을 출입시킨 주점 운영자, 부산시장의 시설 이용자간 1~2m 거리 유지 등 집합제한명령을 위반한 주점 운영자 각 불구속 기소 ('20. 5. 서울동부지검 및 부산지검)
- ▶ 지방자치단체장의 집합금지 명령을 위반하여 참석자 20여명과 함께 방문 판매업체 내에서 상품설명회를 개최한 사범 불구속 기소 ('20. 7. 광주지검)
- ▶ 지방자치단체장의 집합금지 명령을 위반하여 교인 200여명과 함께 교회 현장 예배를 강행한 목사 불구속 기소 ('20. 7. 광주지검)

□ 고의·과실 및 위법성의 판단기준

○ 고의·과실이 인정될 수 있는 경우

- 코로나19와 관련된 손해배상책임이 무과실책임에 이르는 것이 아닌 만큼 집합금지·제한명령의 대상 업체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했다는 사실만으로 대상 업체에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는 없음
-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한 업체에서 지방자치단체장 등의 집합금지·제한명령을 위반하거나 각종 방역조치를 위반한 경우야 손해배상 책임의 성립 요건 중 고의·과실로 인한 위법행위의 존재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음

○ 위법성 인정 여부

- 집합금지·제한명령을 위반한 경우 형사처벌이 가능하므로(감염병예방법 제80조 제7호) 집합금지·제한명령 위반 행위의 위법성은 일반적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큼

□ 인과관계 인정여부

- 집합금지·제한명령을 위반한 행위로 형사처벌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위반행위로 인해 개별 시민들이 코로나19확진판정을 받았고, 그로 인한 국가지자체 손해의 인과관계가 입증된 것은 아님
 - 형사처벌은 위반행위 자체에 대한 사실 및 위법성만 판단하는 것임
 - 손해배상청구액 전액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피고의 집합금지·제한명령을 위반한 행위 이외에 다른 요소가 감염의 원인이 될 수 없었다는 개별 인과관계가 입증되어야 할 것으로 보임

③ 역학조사 방해

□ 동선 허위 신고 등 역학조사 방해 행위

- 감염병예방법 상 역학조사에서 ① 정당한 사유 없이 역학조사를 거부·방해·회피, ② 거짓으로 진술 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, ③ 고의적으로 사실을 누락·은폐하는 행위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(감염병예방법위반 제79조 제1호)
- 역학조사 방해 주요 사례

- ▶ 역학조사관에게 ‘대구 신천지 교회에서 31번 확진자를 접촉했다’고 허위로 진술한 피의자 구속 기소 (’20. 3. 수원지검)
- ▶ 코로나19 확진판정 후 역학조사 과정에서 ‘이혼소송 중인 前 남편을 만난 사실’을 은폐한 피의자 불구속 기소 (’20. 5. 평택지청)
- ▶ 방역당국에 시설물 현황 수백 곳을 누락하여 제출하고, 교인명단을 제출하면서 일부 교인 정보를 누락하거나 거짓으로 기재하는 등으로 방역 활동을 저해한 종교단체 교주 등 관계자 4명을 구속 기소하고, 15명을 불구속 기소 (’20. 8. 수원지검)

□ 고의·과실 및 위법성의 판단기준

○ 고의·과실이 인정될 수 있는 경우

- 감염병예방법 제18조 제3항 제2호는 ‘누구든지 질병관리청장, 시·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이 실시하는 역학조사에서 거짓으로 진술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’고 규정
- 코로나19 확진판정을 받은 자는 역학조사 과정에서 거짓으로 진술하면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처벌될 수 있다는 안내를 받으므로 방역당국에 허위진술을 하는 행위는 감염병예방법 위반에 대한 고의, 추가 피해가 발생할 것이라는 점에 대해 충분히 예견가능하다고 판단됨

○ 위법성 인정 여부

- 역학조사 방해 행위는 형사처벌이 가능하므로 (감염병예방법위반 제79조 제1호) 역학조사 방해 행위의 위법성은 일반적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큼

□ 인과관계 인정여부

○ 역학조사 방해 행위로 형사처벌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방해행위로 인해 개별 시민들이 코로나19확진판정을 받았고, 그로 인한 국가지자체 손해의 인과관계가 입증된 것은 아님

- 형사처벌은 위반행위 자체에 대한 사실 및 위법성만 판단하는 것임
- 손해배상청구액 전액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역학조사 방해 행위가 감염의 원인이라는 개별 인과관계가 입증되어야 할 것으로 보임

※ '20. 10. 22. 제주도는 코로나19 확진 판정 후 역학조사 과정에서 동선을 숨겨 방역에 혼란을 준 목사부부를 상대로 1억 2000만 원 (방역소독비용 139만 원, 확진·접촉자 생활지원비 7350만 원, 검사비용 2515만 원, 진단검사 물품구입비 1286만 원)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

4 자가격리 권고 등 수칙 위반

□ 자가격리 권고 조치 위반

- “자가격리 권고조치”는 보건당국이 코로나19 감염 의심자에게 자가격리를 권유하는 것으로 일종의 행정지도라 볼 수 있음
- 법률상 의무를 발생시키는 자가격리조치에 이르지 않은 권고 조치의 경우에도, 행위자의 감염 가능성 인식 수준 및 이에 상응하는 주의 의무 위반행위에 따른 불법행위책임이 인정될 수 있음

※ 제주도는 자가격리 권고에도 불구하고 외부활동을 한 모녀를 상대로 제주지방법원에 1억1,000만 원 상당의 손해배상소송 제기

□ 고의·과실 및 위법성

- 감염병예방법 상 자가격리조치 위반은 아니더라도, 입국 시점 및 선별진료소의 검체 채취 등 본인의 증상에 대한 인식 정도와 이에 따른 접촉자 감염 가능성 인식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통상 준수하여야 할 생활 안전상 주의의무가 신의성실의 원칙 상 인정될 수 있음
- (사례) 수원시 영국인 확진자의 경우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불법 행위책임이 인정될 수 있음
 - 수원시 영국인 확진자는 관할 보건소에서 코로나19 감염증 확진 여부 판단을 위하여 검체 채취 후 자가격리를 권고하는 내용의 생활수칙 안내문을 교부받음
 - 따라서 위 확진자의 경우 최소한 검체 채취를 받고 자가격리를 권고 받은 시점에서는, 스스로 자가격리 수칙을 준수하고 다중이용 시설 방문을 자제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인정된다고 볼 수 있음

-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크린 골프장 등을 방문하여 5명의 추가 접촉자를 발생시켰으므로, 고의·과실로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추가 방역 등 조치에 따른 손해를 발생시킨 것으로 볼 수 있어 불법행위책임이 인정될 수 있음

□ 자가격리 권고 등 수칙의 위반으로 인한 손해의 발생

- 감염병예방법 상 자가격리조치 위반의 경우와 마찬가지로, 자가격리 권고 등 수칙을 받은 자에게도 그러한 수칙을 준수할 주의의무가 신의칙상 인정된다고 볼 경우, 고의·과실에 따른 주의의무 위반 행위와 국가·지방자치단체의 추가 비용 지출 등 손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볼 수 있음

① 개요

- 비용부담주체가 보건복지부장관 등 국가기관인 경우에는 국가가 당사자가 되는 국가소송,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가 당사자가 되는 일반 민사소송으로 진행(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제2조)



② 관할 법원

-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소송에서의 관할 법원
 - 피고의 주소지 관할 법원(민사소송법 제2조)
 - 의무이행지 또는 거소지 관할 법원(민사소송법 제8조)
 - 불법행위지 관할 법원(민사소송법 제18조 제1항)

③ 절차

- 국가소송
 - 관할 검찰청의 지휘를 받아 개별 국가기관이 소송 수행
 - ※ 예> 국가기관인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출한 비용 일체의 손해배상소송의 관할 법원이 서울중앙지방법원인 경우, 보건복지부장관은 서울고등검찰청의 지휘를 받아 손해배상소송 진행

- 만약 소송물 가액이 10억 원 이상인 경우, 검찰청의 지휘 외에도 소의 제기, 대리인 선임, 상소 등 주요 소송행위 시 관할 검찰청의 지휘 외에 법무부장관의 승인도 얻어야 함(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)
- 지방자치단체의 일반 민사소송
 - 국가소송이 아니므로, 지방자치단체가 당사자가 되어 검찰청의 지휘 없이 독자적으로 관할 법원에 소 제기 등 소송 수행

V

코로나19 구상권 협의체

① 주요 내용

- 법무부는 코로나19 관련 자가격리위반, 방역방해 등 감염확산 행위에 대한 구상권* 행사 협의체(이하 “협의체”)를 구성함으로써, 지방자치단체 등의 소권 행사에 있어 적정성과 통일성을 기하고자 함
 - * 구상금 및 손해배상청구 등 민사절차를 언론보도 상 통용되는 ‘구상권’으로 통칭
- 소권의 통일적 행사 - 일관된 제소 기준 마련
 - 구상권소송 제기 권한은 방역비용 등 부담 주체인 소관행정청, 각 지방자치단체에 분산되어 있어, 공동 대응 필요
 - 전국의 위법행위사례를 공동으로 검토하여 제소기준을 마련하고, 개별 소송 사이의 형평성 도모 및 누락사례 방지
- 적정한 소권 행사 - 분산된 증거·자료 등 취합 및 공유
 - 소송수행 상 주장·입증에 필요한 증거·자료 등*이 여러기관에 분산되어 있어, 적정한 소송 수행을 위해서는 관련기관 간 협조 필요
 - * 예> 역학조사 결과, 수사기관의 수사결과 등

- 협의체 구성을 통하여 관련기관 간 소송수행에 필요한 증거·자료 등을 적법한 범위 내에서 공유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

② 추진 현황

- '20. 9. 29.(화) 협의체 구성
 - 협의체 참여기관 : 법무부, 보건복지부(중앙사고수습본부), 질병관리청(중앙방역대책본부), 서울특별시, 부산광역시, 강원도, 경상남도, 국민건강보험공단, 정부법무공단
 - ※ 정부법무공단은 서울특별시가 제기한 2건의 손해배상청구소송(신천지, 사랑제일교회)의 대리인으로 선임되어 있음
- '20. 10. 14.(수) 협의체 1차 회의 개최
- '20. 12. 24.(수) 협의체 2차 회의 개최

③ 향후 계획

- 향후 월 1회 정기적인 협의체 운영을 통해 소제기 기준 마련 및 적정한 소송 진행을 위한 논의 예정
- 한편, 코로나19 구상권 협의체의 목적 달성을 위해서는 소를 제기하였거나 제기 여부를 검토 중인 지자체 등 기관의 폭 넓은 참여가 반드시 필요함

VI

정부법무공단의 법률 지원

- 국가소송 및 지방자치단체의 민사소송 모두 정부법무공단의 사건 수임 등 법률지원 가능(정부법무공단법 제16조 제1항 제1호)
 - ※ 대리인 선임료 등 소송비용은 수행청(국가기관) 및 지방자치단체 예산으로 부담
- 소송수행청 및 지방자치단체는 개별적으로 정부법무공단과 접촉하여 선임계약의뢰 절차 진행
 - ※ 다만, 수도권 이외 지역 관할 법원 사건의 경우는 정부법무공단의 사건 수임을 위해 법무부장관의 승인 필요

VII

문의처

- 법무부 소송지원 담당자 : 국가송무과 윤경식 사무관(02-2110-3205)
- 정부법무공단 담당자 : 기획홍보실 박종혁 변호사(02-2182-0015)